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2021. 9.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7월 26일, 배현진의원 등 103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7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1년 9월 7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년 9월 8일)

상정 · 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1년 9월 10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배현진 의원)

지난 2015년, 수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이 서린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당시 일본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약속하였지만, 오히려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함.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인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함도 역사왜곡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

이에 본 결의안을 통해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네스코에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군함도 세계유산 재검토 논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취지

배현진의원 및 양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두 건은 ① 일본 정부의 강제노역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을 규탄하고, ② 일본 정부로 하여금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③ 일본이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 내용에 강제노역과 관련된 사실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④ 일본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 및 유네스코¹⁾ 세계유산위원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일본 대표는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

1)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답함.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17년 및 2019년에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15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음.

아울러, 일본 정부가 2020년 12월에 제출한 해석전략 이행현황보고서에는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및 관련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가 불포함되었음.

이에 2021년 7월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이 보존현황보고서 및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제출하여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문이 채택됨.

3. 주요 내용 검토

일본 정부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및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에 일본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두 건의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다만,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해 일부 표현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봄.

먼저, 두 건의 결의안 모두 “군함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한국인의 강제노역 등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23개 시설로 구성되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군함도”를 포함하여 7개 시설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군함도”를 특정하는 대신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는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역 피해도 발생하였고 유네스코 결정문(decision)에도 강제노역 피해의 대상을 “한국인 등”(Koreans and others)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강제노역 피해자로서 “한국인”을 특정하는 대신 “한국인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봄.

그 밖에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주문²⁾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봄.

참고로, 우리 정부는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일반 공개 이후, 동 센터의 문제점 및 일본의 성실한 후속 조치 이행 필요성을 세계유산위원회, 유네스코 사무국, 세계유산센터, ICOMOS³⁾ 등에게 지속 강조해왔으며, 21개 세계유산위원회 대상으로 지지를 요청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조치 이행 현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양정숙의원안 주문 제4호에 언급된 “2022년도 말까지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할 이행경과 보고서”의 경우, 이를 “2022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참고자료 1】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경과 및 주요내용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시	경과	주요내용
2015. 7. 제39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 세계유산 등재 결정	-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 마련을 권고. -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
2017. 12.	일본 제1차 이행경과보고서 ⁴⁾ 제출	- ‘1940년대 한국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 수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일본 산업을 지원’하였다고 언급됨. -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의 목적이 ‘강제노역 희생자 기념’이 아닌 ‘산업유산 보존을 위한 보급과 이해에 기여’로 변경됨
2018. 6. 제42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일본의 제1차 이행경과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 채택	-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⁵⁾의 내용과 관련, △일본 대표의 발언을 포함한 2015년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권장하면서,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
2019. 12.	일본 제2차 이행경과보고서 제출	- 일본의 해석전략은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첨부문서로 기제출했다는 입장 표명하고, 종합적 해석은 산업유산정보센터 완공 시점으로 발표를 보류. - 해당 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지속적 대화의 대상으로 ‘일본 관계부처, 지방정부, 유산소유자, 관리인 및 지역사회’를 언급하여 대한민국을 대화 관련 당사국에 불포함.
2020.6.15.	일본 정부 도쿄소재 ⁶⁾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반공개	-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 및 자료 전시. - 전시 내용에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전무함.

일시	경과	주요내용
2020.12.	일본, 세계유산센터에 해석전략 이행 현황보고서 제출	- 일본은 정보센터 완공 시 해석전략에 대한 이행 현황을 종합 보고하라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석전략 이행현황보고서를 제출 - 동 보고서는 도쿄 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및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약속한 후속조치 및 관련 결정의 구체 이행 근거 불포함
2021.7.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세계유산위원회, 일본의 이행경과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 채택	- 2021년 6월 유네스코-ICOMOS 공동조사단의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점검 활동 환영(welcomes) - 당사국이 약속한 몇 가지 사항 및 위원회 관련 결정을 이행한 것에 대해 만족 - 그러나,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강하게 유감 표명(strongly regrets) - 상기 감안,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할 것(fully take into account)을 요청(requests)

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서(SOC,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5) WHC 42 COM 7B.10

6)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나가사키현 하시마 소재이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도쿄도 신주쿠구에 소재함.

【참고자료 2】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

※ 자료: 외교부

- (1-2항) 제39차(2015), 제42차(2018)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상기(recalling)
- (3항) 2021년 6월 유네스코-ICOMOS 공동조사단의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점검 활동 환영(welcomes)
- (4항) 당사국이 약속한 몇 가지 사항 및 위원회 관련 결정을 이행한 것에 대해 만족(takes note with satisfaction)
- (5항) 그러나,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강하게 유감 표명(strongly regrets)
- (6항) 상기 감안,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할 것(fully take into account)을 요청(requests)
 - a) 각 시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
 - b)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c) 인포메이션센터 설립과 같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
 - d) 유산의 OUV가 적용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모두에 대한 해석전략과 디지털 해석자료 마련에 있어 국제모범사례
 - e) 관련 당사자 간 대화 지속

- (7항) 당사국에 업데이트된 보존현황보고서 및 상기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제출하여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further requests)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재정)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관련 결의안 2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